

보 도 해 명 자 료 (‘19. 6. 12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재생에너지 연계 ESS의 설치 지원은 ‘14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ESS 화재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(매일경제, 한국경제, 조선일보 6.12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)

◇ 재생에너지 연계형 ESS에 대한 설치 지원은 ‘14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함

◇ 6월 12일 매일경제 < “ESS 화재는 人災”...태양광 올인하다 안전 놓쳐 >, 한국경제 < “ESS 화재는 설치·관리 부실 탓” ...정부 ‘태양광 과속’이 화 불렀다 >, 조선일보 < 태양광 줄속 추진에 ESS 잇단 화재... 5개월 조사하고도 원인·책임 소재 못밝혀 >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1. 기사 내용

□ ESS 화재 사고는 정부가 안전관리에는 손을 놓은 채 탈원전 선언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만 밀어붙인 결과 발생한 것임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

□ ESS는 전력 수요관리, 주파수 조정 등 재생에너지 연계 목적 외 설비도 다수 설치되어 있는바, ESS 화재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연결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

* ESS 설치건수(‘18년말 기준)

- 신재생에너지 연계 778개, 전력 수요관리·비상발전 등 712개

○ ESS가 연계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754개소로 전체 사업용 태양광 발전소 총 34,800개소의 약 2.2%에 불과함 (‘18년말 기준)

□ 태양광, 풍력과 연계한 ESS의 설치에 대한 지원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함으로써 재생 에너지 발전의 효율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,

○ 풍력 연계형 ESS에 대한 REC(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) 가중치는 ‘14.9월, 태양광 연계형 ESS에 대한 REC 가중치는 ‘16.9월에 관련 규정* 개정을 통해 도입하였음

*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·운영지침

○ 따라서, ESS 화재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

※ 문의 :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이용필 과장 / 장민재 사무관(044-203-5363)